

# 민주 통합특별시장 경선 과열...후폭풍 우려

## 명의 도용·여론조사 역선택 의혹 등 고발전 격화

## 성명전도 지속...“경선 후 사법 리스크 겪을 수도”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고발전으로 격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혼탁해진 경쟁으로 인해 선거 이후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

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민형배·김영록(기호순) 후보 캠프 사이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민 후보 측 민심캠프는 특정 시민의 명의 무단 도용한 김영록 후보 지지 문자 대량 발송 사례를 적발해 민주당 중앙당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직 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

찰에 고발했다.

또 전남 일부 고령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대리 온라인투표 일반' 정황과 SNS·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사례도 포착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후보 측 탄탄캠프와 우호 진영인 신정훈·강기정 단일후보 측은 '단일화 여론조사 과정에서 역선택을 유도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민 후보 측을 광주경찰청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또 '예비경선 직후 민 후보 측이 제작·

유포한 카드뉴스가 마치 경선 1위 득표처럼 보이게 했다'며 선관위에 고발했고, 지난 연말 제3차 기부행위도 문제 삼았다.

일부 캠프에서 불법·허위 선거 제보 창구를 운영 중이고, 결선 과정에서 양 캠프로 크고 작은 제보도 잇따르고 있어 고발전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성명전도 이어가고 있다.

민 후보 측은 최근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김 후보 캠프 합류와 일부 구정장의 김 후보 캠프 합류에 대해 "낯은 정치 문법과 기록된 카르텔인 '배신동맹'"이라 견제했다.

김 후보 측은 민 후보의 '배신동맹' 발언에 반발하는 동시에 "통합특별시 주 정치무안 이전은 유언비어"라며 민 후보 측에 대해 악의적인 루머 유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양측의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이 극에 달하고 몰종도 서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선 후 사법 리스크로 후유증을 겪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들에 대해 선예단할 순 없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 규정이 세밀하게 설계돼 있어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배우자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낸 경우에는 해당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등구, 2026년 집중안전점검 최초보고회 광주시 등구는 13일 상황실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서별 점검계획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집중안전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지원 본격화

## 정부 추경 국회 통과...27일부터 접수해 지급

전남도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 민생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는 정부 추경에 반영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1차는 기초·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는 소득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지급 대상과 세부 금액은 정부 확정 기준에 따라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소득계층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전남도는 비수도권에 해당해 기본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며, 인구감소 우대지역 5개 시군(담양·영광·영암·진도·화순)은 20만원, 특별지역 11개 시군(강진·고흥·곡

성·구례·보성·신안·완도·장성·장흥·함평)은 25만원으로 상향된다. 별도로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인터넷은행·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카드 연계 은행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급수단으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 추경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도, 아동 돌봄·보호 강화에 4196억 투입

## 건강한 성장·취약아동 보호·권익증진 등 234개 사업

전남도는 최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234개 사업에 4196억원을 들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취약아동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취약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제3차(2025~2029년)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이다.

분야별로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124개 사업 2507억원 △취약아동 보호 강화 73개 사업 1599억원 △아동 참여 기반 권익 증진 37개 사업 90억 원이 반영됐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돌봄 공백을 최

소화하고 취약아동 맞춤형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정교화해 아동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출생기본소득 지원,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운영, 외국인 아동 보육 등 지원 등 특화사업을 확대하고,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인 지원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아이들의 삶의 질이 곧 지역의 미래 경쟁력"이라며 "아동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여수서 '기후환경 에너지대전'...국제 비즈니스 플랫폼 가동

## 유엔 기후주간 연계...글로벌 기업·기관 참여 확대

## 수출상담회 병행...해외 판로 개척·성과 창출 기대

탄소중립 전환과 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한데 묶는 대규모 국제 행사가 여수에서 열린다

전남·광주 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산업 협력의 방향성과 시장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하는 자리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026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대전 (KEET)'을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여수 세계박람회장 엑스포 디지털갤러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관광공사가 주관한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기후주간(4월 21~25일)과 녹색대전환 국제주간(GX Week)과 연계해 운영되면서,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과 산업 흐름을 공유하는 국제 비즈니스 플랫폼 성격이 강화됐다.

행사장에는 신재생에너지와 태양광·수질·대기환경, 폐기물 처리, 자원순환, ESG,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산에너지

지, 이차전지, 스마트그리드 등 기후환경·에너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들이 참여한다. 최신 기술과 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선보이며 산업 간 연계 가능성도 타진한다.

이와 함께 국내 대표 환경·에너지 비즈니스 행사인 글로벌그린허브코리아와 연계한 수출상담회를 병행해 참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순 전시를 넘어 실질적인 계약과 협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일반 참가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자가발전 자전거 체험과 해양폐기물 업사이클링, 친환경 테라리움 만들기 등 탄소중립 실천형 콘텐츠를 운영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행사가 산업 협력의 시험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의 재생에너지 기반과 광주의 첨단산업 역량을 결합해 통합 이후 산업 구조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업감독관은 "전남 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 기후환경·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자리"라며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 속에서 전남이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정치개혁 좌초 책임 여야 모두에”

## 광주시의회, 국회 정개특위 비판

광주시의원들은 13일 성명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 획정 논의를 지연하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야 4당이 약속한 정치개혁이 끝내 무산되고 분회의 문턱에도 오르지 못했다”며 “여야 모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보이콧 정치와 민주당의 선택적 합 의원이 정치개혁 좌초를 조장했다”며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조정 등 선거의 핵심 규칙을 정하는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원들은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도 제도적 기반이 확고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는 단순 지연이 아닌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의 구성 등 주요 개혁 과제가 답보 상태에 놓이면 지역 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광주시의원 일동은 정개특위의 정치개혁 과제 조속 처리, 국민의힘의 선거구 획정 협력,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의 의원 정수 기준 신속 제시 등을 촉구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민주 광주시당, 광역의원 경선 일정 돌입

## 후보 접수 15일...20~21일 당원투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6·3지방선거 광역의원 경선 일정에 돌입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13일 광역의원 후보 경선 안내문을 통해 14일 경선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19개 광역의원 지역구 경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체 20개 지역구 가운데 단수공천인 서구3은 경선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선 후보 접수는 오는 15일, 경선 설명회는 16일 각각 열리고, 경선 투표는 20~21일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100%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당 직격 심사를 통과한 광역의원 후보는 모두 67명으로, 서구4·남구1·광산1·광산2 등 4곳은 경쟁자가 가장 많아 5

파전으로 치러진다.

동구2·남구2·북구2·북구6·광산5는 4파전, 서구2·남구3·북구1·북구3·북구4·광산9는 3파전으로 확정됐다. 동구1·서구1·북구5·광산4는 2인으로 진행된다.

시당 관계자는 “정수 조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다릴 수 만큼 없어 경선 일정에 돌입하게 됐다”며 “정수가 조정될 경우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원 정수 조정을 논의해온 국회 정개특위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법안 처리 마지막선이 오는 17일이지만, 지난 10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정치개혁 법안 상정도 무산됐다.

이신하 기자 goback@